

# 의정활동보고서

제161회 임시회 (2001. 9. 7 ~ 9. 14)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비회기중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중앙정가에서는 당정개편과 새로운 내각 구성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도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순리와 정도로 민심에 다가서는 도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영천지방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하여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얼마전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현상이 동해안에 까지 번져 도내 양식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콜레라와 적조현상 등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도민들을 찾아 격려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도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급증설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도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서는 도정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점검하시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함과 아울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높은 도정질문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는 질문하시는 의원의 질문이 곧 도민의 뜻을 인식하고,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 동료의원님께서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오늘이 백로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 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9. 7

경상북도의회의장      柳 仁 熙

# 차 례

I. 개 황	.....
II. 의사 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위원회	.....
III.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위원회	.....
IV. 도정질문	.....
V. 민원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VI.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

2.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 .....

3. 조례공포사항 .....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

5. 기타사항 .....

부 록

예산안 .....

조례안 .....

결의안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61회 임시회는 2001년 9월 7일 개최하여 9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6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9월 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 선임보고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 및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1일 200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였다.

9월 12일과 9월 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9월 14일 오전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

한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질서확립을위란우리의결의안,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제16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II. 의사 일정

###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요구 : 김응규 의원 외 19인

다. 집회 공고 : 2001. 8. 27

라. 집 회 일 : 2001. 9. 7

###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1. 9. 7~9. 14 (8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4회(누계 105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자치 행정	교육 사회	농수산	산업 관광	건 설	예결 특위	양민 특위
금회	6			2	1	1		1	1	
누계	475	38	72	76	79	60	53	43	53	1

※ 누계는 제6대 의회 누계

### 3. 활 동

####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1.9.7(금) 11:00	1. 제161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9.12 ( 수 ) 11:00	도정질문 ○ 정보호(자치행정, 구미) ○ 신영호(교육사회, 의성) ○ 손규삼(농 수 산, 포항) ○ 채희영(건 설, 문경)	제 2 차
9.13 ( 목 ) 11:00	도정질문 ○ 손중호(산업관광, 청도) ○ 김종섭(기 획, 김천) ○ 박성만(자치행정, 영주)	제 3 차
9. 14 ( 금 ) 11:00	1.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5. 생활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 6.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 4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나. 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1.9.11(화) 11: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1.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1.9.13(목) 16:15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1. 생활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 채택의견	제 2 차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1.9.10(월) 11: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1.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3.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1.9.10(월) 13:30	<input type="checkbox"/> 주요 현안사항보고 - 적조피해 및 방제현황 보고	제 1 차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1.9.10(월) ~9.11(화)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경기도 도자기 엑스포 (이천,여주,광주)	

<건설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1.9.10(월) 11:00	<input type="checkbox"/> 주요 현안사항 보고 -7.14~15호우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1.9.11(화) 11:00	<input type="checkbox"/> 안건심사 1.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Ⅲ. 의안 처리

####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8 (323)	8 (323)	6 (271)	2 (51)	(1)				
조 례 안	소 계	4 (203)	4 (203)	2 (168)	2 (34)	(1)			
	의 회 제 안	(12)	(12)	(10)	(2)				
	도 지 사 제 출	3 (145)	3 (145)	1 (117)	2 (27)	(1)			
	교 육 감 제 출	1 (46)	1 (46)	1 (41)	(5)				
예 산 안	1 (21)	1 (21)	1 (6)	(15)					
동 의 · 승 인	(38)	(38)	(38)						
건 의 안	(14)	(14)	(14)						
결 의 안	2 (17)	2 (17)	2 (16)	(1)					
기 타 안	1 (30)	1 (30)	1 (29)	(1)					

※ • ( ) 내는 제6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7 (352)	7 (340)	4 (203)	2 (30)	(46)	(14)	1 (16)	(31)	(4)	(4)	(4)
의회운영	(13)	(11)	(4)	(1)	(1)		(1)	(4)	(2)		
기 획	(22)	(22)	(13)	(1)	(8)						
자치행정	3 (80)	3 (75)	2 (60)	(1)	(11)	(1)	1 (2)			(3)	(2)
교육사회	3 (81)	3 (79)	2 (69)	1 (3)	(5)	(1)	(1)			(1)	(1)
농 수 산	(16)	(15)	(11)	(1)	(1)	(2)			(1)		
산업관광	(31)	(29)	(23)	(1)	(2)	(3)			(1)		(1)
건 설	(20)	(20)	(15)	(1)	(1)	(1)	(2)				
특 별	1 (30)	1 (30)		1 (21)	(8)			(1)			
본회의	(59)	(59)	(8)		(9)	(6)	(10)	(26)			

## IV. 도정질문

### □제2차 본회의.

#### 정보호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경상북도의회 제161회 임시회의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북도정의 발전과 3백만 전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향토 교육발전과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승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9일 언론매체에는 8월23일자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차입금을 조기에 전액 상환하여 IMF를 졸업하게 되었다, 잃었던 나라의 경제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라는 기사가 한국은행 총재의 채무상환 서명 사진과 함께 보도된 바 있고, 청와대에서는 이를 자축하는 축하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주변상황이 지난 '70년대 중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 겪는 전 지구적 성격의 불황에 동반 편성하여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경제적 현실이 실질적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오히려 악화되어 있다고 보며 성급하게 삼페인을 터뜨릴 시기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사회적 혼란, 경제적 파탄, 교육적 가치붕괴, 이념적 대립과 갈등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오늘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개인적인 기쁨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는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본 의원과 똑같은 심정으로 슬기로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북을 발전적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본 및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품 브랜드화를 공동으로 개발·육성·지원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술수준 향상을 통하여 제품의 고급화를 추구하여 국·내외 판로를 개척·확대한다는 훌륭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의 향후 발전방안으로 OEM생산방식을 탈피하여 산·

학·연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제품개발로 대외경쟁력 확보, 전자상거래 구축을 통한 판로망 개척, ISO 국제품질인증 획득, 공동마케팅을 통한 홍보·판매 활동을 전개하며, 상설매장 및 전용매장 확보, 국내 마케팅 활동과 해외 공동매장 설치, 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 시장개척단 참여 등의 국내외 판로 개척활동을 전개하고, 정착단계에 가서는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공동브랜드 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한다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실라리안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출발하여 올해 상반기의 매출액이 18억9,000여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매출액 6억8,000만원에 비해 외형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전용 홍보전시 판매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기업의 공동브랜드로써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은 물론, 사업방향조차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실라리안의 홍보방법에 있어 이론적·추상적 방법보다는 현실적·구체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전제 하에, 먼저 우리 경북이 “주식회사 경북”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지사의 승용차를 비롯한 경상북도 소유 전체 차량에 실라리안 심벌 로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면 어떨는지요. 실라리안의 심벌 로고가 예쁘고 깨끗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째, 도청을 포함한 23개 시·군 청사 내 적절한 공간(예를 들자면 민원실 등)과 지역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고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에 실라리안 제품홍보 전시장을 상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만약 도 전체 시·군의 제품 상설전시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우선 도 본청과 주요 시청만이라도 즉각 설치토록 하고,

셋째, 실라리안의 연간 홍보비가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쓰이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적고 낭비성인 홍보방법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일선 시·군에 꽃길 조성용 화분제작비를 지원하여 그 화분에다 실라리안 심벌 로고를 부착·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넷째, 매주 토요일 또는 격주 토요일에 실라리안의 날을 선정하여 이날은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라리안 배지달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라리안의 참여업체수가 나리콜렉션, 나눔공동체, 남경직물, 동협공예, 학산도예, 한국 크리스탈 등 19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종류 역시 섬유, 공예, 생필품 등 극히 단조로운 수준입니다. 본의원은 향후 실라리안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참여 기업수를 증가시키는 물론 생산제품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대책에서 21세기 경영기법 도입을 제시하면서 산·학·연 협동체제와 전자상거래 구축, ISO 인증획득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인 전략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해안 적조 피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14일 전남 남해안에서 처음 발생한 코클로디니움종에 의한 유해적조가 25일 경주시 양남면 감포 횡단해역에 이어 27일 오전에는 포항 앞바다, 30일에는 울진군 죽변해안까지 확대되어 막대한 어업피해를 발생케 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된 이 적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밀도화 하였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90년도 중반 이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적조현상에 대해 아직까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황토살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달 25일부터 우리 도의 해안지역에 적조가 내습했지만 소형어선 몇 척을 이용한 황토살포 방제를 하는데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적절한 예찰활동과 신속한 제거조치만이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적조현상에 대해 그 예방대책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예방과 사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발생한 적조피해액과 피해어민 지원대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조발생시 액화산소, 순환펌프기 등의 적조예방장치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장비를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환경오염의 심화에 따라 적조현상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적조 피해방지 장비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조로 인하여 폐사한 어류를 비료,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면 다소나마 어민들의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우리 도가 활용 가능한 예방장비는 69톤급 경상북도 행정지도선 ‘경북201호’, 29톤급 포항시 수산관리선 ‘경북207호’, 7.8톤급 포항해양청 소속 ‘경북886호’, 39톤급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소속 ‘탐구선’ 등 모두 4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선박은 모두 소형선박들이어서 파고가 불과 2m만 넘어도 해상 예찰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동해 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해상에 3m이상의 높은 파도가 있어 29일까지 선박 예찰활동과 황토살포 등의 방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적조예찰용 선박의 수를 증가시키는 물론 선박규모의 대형화를 주장하며 아울러 파고에 관계없이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적조예찰용 헬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적

극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적조예찰용 헬기의 확보 방안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해당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조피해는 동해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몇 사람의 피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죽도 시장과 동해안지역에 소재한 활어횃집의 개점 휴업상태로 동부지역의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연구용역 시행이나 전문가를 확보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세 번째 콜레라 전염병 발생 및 공공의료 보건기관 인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인 내년은 전세계인의 스포츠제전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지역내 대구 월드컵 운동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 구장에서 열리게 되며 방한하는 외국의 손님을 맞이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와 가을행락철, 또 얼마남지 않은 세계유교문화축제를 맞아 많은 내·외국인들이 우리 도를 찾고 있는 이 때 후진국에서나 발생할법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여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경북의 지역이미지 추락과 함께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내의 단체학생 수학여행단마저 우리 지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분야인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2001년도 8월 중 그리고 9월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확대운영,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상황점검 등의 업무계획이 소상하게 수립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허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감염경로도 파악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역학조사와 허위로 부풀려 올라오는 방역실적 보고, 손발이 맞지 않는 탁상공론 대책과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는 격리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리치료를 하지 않아 확산되는 등 느장대응과 구멍뚫린 방역대책이 어우러져 빚어진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콜레라 전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콜레라 환자 발생 수와 피해상황, 그리고 이토록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조치사항, 사후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발생원인이 대중식당의 종업원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는

등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대책을 세워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이와 관련한 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업무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환자가 발생한 후의 사후처리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행 보건위생업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보건위생과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보건소가 있는 일선 시·군은 위생 지도업무 따로, 사후관리 따로인 이원화 된 현행 체계 아래에서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고 대처능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공공의료기관 즉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조직,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조직기준,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지역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인력현황에 따른 도내 공공의료보험기관별 의료인력 확보현황은 보건소 25개소에 의사 53명 정원에 68명, 치과의사 25명 정원에 24명, 약사 30명 정원에 7명, 보건지소 216개소에는 의사 219명 정원에 215명, 치과의사 180명 정원에 94명, 약사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인 배치 현황에서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 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다수 있다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의약의 불균형 심화로 의약분업 정착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최소 배치기준 미달 보건소의 내역과 최소 배치기준 초과 보건소의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의사의 경우 청송군의 경우 최소 배치인원이 1명인데 현인원이 11명, 울진군의 경우 최소 배치인원이 1명인데 현인원이 10명, 울릉군의 경우 최소 배치인원이 1명인데 현인원이 8명으로 각각 10명, 9명, 7명이 초과배치 된 과정과 인사배치의 기준 그리고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금과 같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을수록 오랜 역사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지고 있던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조국근대화와 경제부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결단력과 추진력, 남기신 업적이 본 의원의 가슴에 그리움으로 와 닿습니다.

박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99년8월18일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2000년8월16일에는 그 동안 기념관 설립 장소문제로 논란을 빚어오던 것이 기념관, 도서관은 서울시 상암동에 건립기로 하고 경북 구미시에 생가보존기념사업을 병행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대통령 기념관이 300만 도민은 물론 국민적 여론대로 생가가 있는 우리 지역에 건립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또한 지금의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대통령 기념사업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기념관의 건립규모가 당초 2,500평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1,500평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고 200억원과 기부금 500억원 등 모두 7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1월부터 오는 2003년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 조달된 재원은 국비 100억원과 기부금 14억원, 계 114억원으로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사업비 188억원으로 기념도서관 건립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차질을 빚고 있는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도시자님의 소신과 부족한 재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이 제출된 질문서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2, 3일 전에 제출한 질문서 요지에 따라서 회의록에 등재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특히 구미시의 생가보존 사업과 병행 추진키로 했던 당초결정은 아직 기초자료 수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당초 합의했던 기념사업회의 경북도와 구미시와의 협의도 단 한차례도 없는 바 이는 시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대통령 기념사업을 서울에는 기념관 설립을, 생가가 있는 구미에는 생가보존 사업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박대통령 기념사업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념사업의 두 축 중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북지역의 의사(意思)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우리도에서는 지사님 한 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생가 보존사업의 실효성과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구미시장 등 구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책임있는 인사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기념사업회와 경북도, 구미시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가짐으로써 생가보존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근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자, 우리 경북에서 맨 먼저 주창한

사업이며 또한 생가가 있는 35만 구미 시민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우리 300만 경북도민의 염원이며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박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모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박대통령 기념사업을 근대화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도가 앞장서 주도해야 함에도 기념사업회가 발족된 후 지금까지 대응자세를 보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우리 도의회와 지역내 각 사회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 교육은 결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장기적이며 신중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고 믿고 있으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 방향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오늘 날의 교육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도출되고 있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개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혁이라고 합니다. 종전(1차~6차)과 같은 단순한 교육내용의 개정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과정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생수준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의 효율성과 더불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을 살펴볼 때, 입시과열과 대학의 서열화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준별 교육의 도입은 새로운 우열화 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사교육의 증가를 부채질 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수행평가, 보충수업 폐지, 특기적성교육, 대입특별전형 활성화 등 대부분의 개혁정책이 사교육비의 증가로 귀결되어 실제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5%나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서는 우리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2001년도 사교육비는 어느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IMF로 인해 대량 실업 사태 발생 등 쪼들리는 서민 가계지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보다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교육비 억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시는지? 만약 사교육비 억제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새천년을 열어갈 경북교육의 방향』을 보면, 영어 인증제와 교원정보소양제 실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전시 행정적인 이 시책으로 인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영어인증제와 교원정보소양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7차 교육과정의 실시에 따라 수학과 영어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보충반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고 있어 담당교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용 지침(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제 2000-2호)』에 의하면,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외국어과정, 예·체능과정, 공통과정 등을 구분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임에도 실업계 고등학교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데 실업계 고교를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번 제2차 교육청 추경예산에서 OECD 수준의 학급당 편성인원인 35명 이하에 따른 교실증축 예산에서도 실업계 고교를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작년 우리 도내 소재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인 영주공고, 선덕여상이 인문계 고교인 제일고와 선덕여고로 전환한 것은 실업계 고교의 지원소홀에 의한 것이 아닌지? 향후 실업계고교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인원 35명 이하에 따른 학교 및 교실의 신·증축은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이러한 학교 및 교실의 신·증축사업 시행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교사 및 교보재 등 교육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에 대한 우리도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추진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운영 중 학부모 부담 제(諸)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부담 소비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교복과 졸업앨범의 구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련의 행위에서 중요한 점은 가장 적절한 한도의 비용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교복과 앨범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문하

겠습니다.

먼저 일선학교에서의 교복구매는 3대 교복메이커의 담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집단 손해 배상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발표와 지금까지 폭리를 취한 업자들에 대해 여러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해 냉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를 실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내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그 금액을 밝혀 주시고, 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 공동구매를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졸업앨범이 시중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원인은 주로 앨범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의 선정기준과 방식을 밝혀 주시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구입단가를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군부대 장병, 관계공무원, 어민대표 등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콜레라 발생 이후 오늘까지 밤 낮 없이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라리안 제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라리안 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이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리 도에는 경북통상이 있습니다. 경북통상이 하는 일이 해외수출 업무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내역에도 보면 국내·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사님, 혹시 지사님의 시상품에 대해서 실라리안 제품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지, 사용하신 적이 있으면 몇 번에 얼마큼을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일선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중 실장님께서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3,500매 제작해서 부착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좀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다른 어떤 상표보다 모양이 괜찮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적조발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조발생 원인 및 우리 지역의 피해현황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유해성 적조는 '95년도 이후로 격년 주기로 발생되어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도 보면 '95년

이후로 격년 주기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1년 금년도가 적조발생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해안에서 발생했을 때 적조발생에 대한 예방·예찰을 더 강화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예방·예찰활동을 강화 했더라면 지금보다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적조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황토를 확보한 것이 총 1만톤 확보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체는 9월8일 현재 2만톤 이상 황토살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황토량이 실제 한 것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격년 주기로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또 일찍이 8월14일 남해안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확보를 했었더라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지사님께서 8월29일날 항공예찰 및 피해예방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30일날 군부대에 지원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8월14일날 남해안에서 발생했지만 8월25일날 우리 경북지역 해안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빠르게 지사님이 해 주셨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피해양식장에 대해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피해어민들에게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쓸쓸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콜레라 발생문제로 영천 뷔페식당의 종업원 3명이 지난 달 14일 날 포항 죽도시장에서 회를 먹고 난 뒤에 15일날 설사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 식당을 이용한 손님 중에서도 같은 증세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식당을 찾아가간 것은 보름이 지난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식당 종업원 3명이 조리사 자격증이 다 있는지 안 그러면 몇 분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신고체제가 굉장히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신고체제를 신속하게, 좀 빨리함으로 인해서 전염병 확산을 줄일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병원이나 약국 등 신고체계를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신고체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좋은 방법의 개선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이 지금 포항 죽도시장하고 영천시내의 식당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참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역학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95년도에 68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포항의 어패류가 원인이라

고 밝혀졌습니다. 포항의 어패류가 원인이다라고 '95년도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나서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콜레라 발생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경북이 좋지 않은 분야, 법정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안되는데 우리 경북에서 '95년도, 금년도 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마는 이런 누명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 쪽에 인식되어 지는 것이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보다 더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8일 양일 간 영천에서 시·군대항 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왜 대회를 연기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심한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진지하고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경북교육청에서는 2000년5월23일날 2004년까지 초·중등학교는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1년7월20일날 교육감님 말씀대로 청와대 보고에 의해서 갑자기 이 7차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차 추경의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단 이 7차 교육과정 예산에 따른 문제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02년 2월달까지 공사를 준공해야 하는 공사기간의 촉박성,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두 번째,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의 방지책이 어떤 것이 있을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빨리 강행 하다 보면 학교 내 면학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신영호 의원(교육사회위원회)

의성군 출신 신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평소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의근 지사님, 또 경북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쌀 산업 붕괴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재고량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쌀 재고 관리부담과 함께 쌀값 폭락이 우려되면서 국내 쌀 산업이 붕괴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를 통해 쌀 산업에 대한 위기감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깃발 아래 풍년을 구가하는 쟁과리 소리가 온 들녘에 퍼져야 할 즈음 풍년가는 온데 간데 없고 농민들의 긴 한숨소리와 아우성과 절규만이 들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찬 농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WTO협상에서 쌀만은 최대한 지켜줄 것으로 믿고 묵묵히 일해 왔는데 급기야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쌀 농사를 포기함과 다름없는 약정수매제 포기, 쌀증산 억제정책, 쌀값 시장 기능에 따른 시가매입 등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 농사가 설마 했더니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 농민은 중앙정부를 탓하기 전에 그래도 평소 농도경북을 부르짖으며 3백만 도민의 지주로서 도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의근 지사님께 70만 농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농민의 절규로 받아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와 올해 쌀 생산 예상량과 수매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쌀값하락으로 농협 및 민간보유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쌀시장유통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 경상북도의 쌀 수급계획과 가격안정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시오.

다음으로 쌀 증산정책에서 품질 좋은 쌀 생산 정책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안정적인 판매처 개발과 쌀 소비촉진운동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육류, 면류,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95년 106kg에서 2000년에는 93kg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무조건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경북이 앞장서 연구 노력하는 의미에서 양질미

생산과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과거 우리 도에서 시행한 소고기 품미증진 용역 의뢰같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증산 정책을 억제하면 농가의 소득이 반감하므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생계대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끊임없이 물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이는 우리가 물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단골손님처럼 찾아오는 한해를 겪어오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정개발, 하천굴착 등 임시방편수단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한해대책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형 저수지의 신설, 제당 더 쌓기, 준설지하댐 건설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요예산 투자계획과, 현재 담수량과 시행 후 담수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데, 과거 지하수개발법 제정 이전의 개인소유관정은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관정의 개소수와 그 활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활용하고 있지 않는 폐공관정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지하수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폐공수와 오염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처리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많은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농사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준설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담수시에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면 지사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금년 하반기에 준설완료하여 내년 봄 우수기에 충분히 담수함으로써 내년 한해에 대비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원천인 지방세가 최근 들어 경기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법인이거나 개인이 고의든 실수든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공기업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에서 액수를 낮추어 신고하거나 누락시켰다

가 적발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고의누락 등 기준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등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그 대상과 추정세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1년7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496억원으로서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세도 무려 481억원이나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도세 51억원, 시·군세 103억원 등 총 154억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정말 결손처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IMF이후 부도로 폐업하는 법인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납세력이 부족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문제는 공기업까지 고의누락, 축소신고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세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면서, 현재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정리를 인력과 시간,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정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체납세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직 경찰관, 세무사, 회계사, 채권추심전문가, 공매전문가 등 이른바 재야의 체납세 징수 베테랑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서 그 노하우를 공무원들이 전수받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세계유교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제를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세계문화엑스포는 공무원과 도민, 또는 타시·도 등에서 홍보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는데, 유교문화축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또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고, 한시 기구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두 개 기구가 별도 존재하는 이유와, 그 고유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 또 향후 투자계획과 투자효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여 만들어진 기구와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차후는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 대통령께서 북부지구 유교문화권에 1조원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 그 추진

내용과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내용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경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상건조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됨에 따라 크고 작은 산불이 총 119건이 발생하여 388ha의 산림을 잿더미화함으로써 공익기능을 포함한 약 6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17일에는 안동의 국유림 산불진화도중 헬기추락사고로 인해 귀중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불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한 산불관련 법규위반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발생 원인 중 실화부분의 대부분이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폐기물인 폐비닐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최선이나 광활한 산림면적을 감안할 때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초동진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불의 초동진화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잡목 및 넝쿨식물의 식생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재래식 장비와 인력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헬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소방헬기 한 대와 임차헬기 다섯 대 등 권역별로 배치되어 산불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헬기구입 및 임차헬기 대수를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상 당장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꼭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차헬기의 높은 기동성과 광역성,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헬기임차에 따른 해당 평균 임차료 5억원 중 그 10%에도 못 미치는 4,000만원만을 도비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임차헬기의 광역적 효율성과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도비보조비율을 다른 시·도와 유사한 5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도와 경상남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금으로 약 60억원의 도세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순환수렵장의 사용수익금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에 의해 조수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47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규삼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늦게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농경시대 때는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 해서 정말 논을 많이 갖고 있는 농민들이 부자이고, 가솔도 많고, 머슴도 들이고 해서 시골경제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간에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논농사 짓는 분들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WTO협정에 의해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쌀 농사는 그 협상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늘농사 짓는 분들은 휴대폰 팔아먹기 위해서 협상하는데 완전히 KO편치 하나 맞고 완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는 도대체 농업정책을 바꾸려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쌀가격이 아무리 폭락되더라도 쌀은 조금도 감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농토를 식량안보라는 미명아래 쌀농사만 짓는 지역으로 묶어졌습니다. 이 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토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진흥지역은 금방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땅 가진 사람 운명이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성패가 납니다.

홍해들에 논 한평에 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만원입니다. 과수나 채소 등은 과잉생산이 될 경우에 가격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산이 되고 감산이 되고, 이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도가 어떻습니까? 농지법 10조, 11조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논을 놀렸을 적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단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논을 처분해라, 이렇게 농업기반공사에 ‘나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내 논을 기반공사에서 좀 사주세요’ 이렇게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부과금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추징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논농사 짓는 농민만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다 짊어져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의 큰 재벌들이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져야 되지. 여러분, 요즘 헬스

가고 땀 빼고 운동하고 하지요? 농업인들 가만히 있어도 땀 빼고 운동됩니다. 월남 사람들 같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영원히 논농사만 지어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1ha에 20만원 직불제 주는 그런 사탕발림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대책을 좀 세울 수 없느냐,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쌀농사 짓는 농민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파산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지금 포항항에는 계속 현미를 실어다 갖다분습니다. 포항에 현미를 1,400톤 떨어트리고 여러분들, 단위조합장들 쌀 팔러다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설치는 RPC공장 옆 창고에 수송이 되어 갑니다. 중국산 곡물이 서해안에 밀수되어 온다는 것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30%도 안됩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수요와 공급에서 10%만 남아돌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떨어집니다. 조금 남는 것이 가격의 진폭이 엄청나게 큼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무슨 냉해가 갑자기 온다든가 해서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면 재고가 삭 없어지겠지만 이것을 그냥 땀질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더 연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쌀을 또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곧 여기에 대한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새만금에 간척지를 개발해 가지고 1개 도가 1년 먹을 식량을 수조원 들여서 또 생산합니다. 이 쌀값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고... ‘국민 식량의 안보’ 라고 하는 분들이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 지사님부터... 여러분들중에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가서 쌀농사 지을 분 한 분도 없어요. 누군가가 쌀농사를 지어서 내 배를 좀 채워주면 좋겠다, 식량 안보하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농촌에서 생명을 걸고 논 몇마지기 가지고 아이 공부시키고 논은 농협에 저당이 다 되어서 논값이 하락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1년 지나니까 돈 갚을 길은 없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추가담보권을 가지고 오너라’ 하면 갖고 갈 것 없어요. 그러면 곧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농촌경제가 제일 먼저 파산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경제는 정말 풍전등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연쇄적으로 농협도 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은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라고 하는 미명아래 경제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전업으로 선택해야 할 농민들의 자유를 뺏어버린 데서 문제가 온 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농은 대농대로 영세농은 영세농 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라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는 지사님이 시장·군수회의를 소집해서 완제품으로 가공된 쌀은 타도의 쌀이 자기네 구역 안에 한 톨도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아라, 타도에서 들어온 쌀을 못 막는 시장·군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독려를 한답니다. 그 예로 포항에 있는 모 조합장이 강원도에 쌀 팔러 갔다가 쫓

겨 왔어요. ‘우리 지사님이 알면 큰일난다, 보조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된다’ 이러 더랍니다. 과연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회의를 한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쌀의 소비지입니다, 동·서화합도 좋지마는 경북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돼요. 그런데 대구시에는 전라도 평야의 쌀을 다 팔아먹고 가는 데 우리 안방을 다 내어준 것 아니냐, 대구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물은 경상북도에 흘러내려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구시장님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경상북도에 생산된 쌀 팔아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발생에 대한 관계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마을앞 1종 공동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네를 경계로 해서 전북도 풀고 해삼도 기르고 미역도 따고 해서 팔아 가지고 공동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1종 공동어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재해보상법에는 1종 공동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조가 9월3일부터 밀려 들어와서 월포에서 영덕군 일부까지 4일 내지 5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5년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 곳에는 풀까지 다 죽고 백화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본의원이 직접 그 자리에 갔을 때에도 돌 밑에 있는... 어린애들이 장대로 해서 낚기도 하는 그런... 우리말로 놀래기, 또 전복, 성게 등이 다 죽었어요. 삭 다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종 공동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귀되는 데는 자연대로 놓아두면 감포에 갔을 때 어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5년이 되어야 자연상태로 복귀가 되는데 그나마도 드문 드문 고기가 나타난답니다. 이 1종 공동어장에는 재해대책보상법에도 없고 하니 이 1종 공동어장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복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행정단위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읍, 면, 동의 기능을 전환하고 또 거기의 기능을 자치센터화한다, 이릅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면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이 자치센터화가 되면 건설·재무행정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된답니다. 지금 읍·면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읍면 재무계에 가면 과거에 토지세니 뭐니 조금씩 내던 것이 1년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조건표대로 세금이 나가면 1만원 내던 세금이 2만원이나 3만원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되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구청까지 가야 될 일도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센터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헬스클럽 만들고, 목욕탕 만들고, 운동하는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하는데 현재 본의원의 지역구인 기계, 죽장, 신광 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다 있어요. 목욕탕도 다 있습니다.

또 헬스장 만들어놓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헬스하러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면장에게 전화해 보니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하니까 3사람, 4사람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고추 따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헬스하고 땀 빼면 고추 고랑에 가서 얼어져요, 힘 빠져 가지고. 또 도회지에 동 단위에 헬스장을 만들고 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세금 내고 하는 유료 헬스장이나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까마는, 어떤 분이 정권을 잡아서 먼저 그리던 분이 그림에 스케치를 해 놓고 나가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거기에 또 물감칠을 조금 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했는 사람들의 것은 전부 칠판 지우듯이 삭 지워 버려요. 이것은 다 틀렸다, 개혁해야 된다, 새로 그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 인원 감축하고 공연히 있는 사무실을 자치센터화한다고 해서 뭐 만들고 하다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몇 년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자치센터를 만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복지센터 있고 헬스장 있고 다 있는데 또 읍사무소 뜯어고쳐서 헬스장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처럼 “지방자치 한다, 지방자치 한다.” 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카드가 하나 내려오면 꼼짝없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느냐,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자치센터화가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읍, 면, 동에 대해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편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불 나고 문제가 생기면 TV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산불 나는 면장은 해고시킨다, 보직을 박탈한다고 하던데... 일시킬 때는 면장님들의 보직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읍·면장에 대한 행정력은 적조발생, 산불예방, 태풍 및 천재지변 피해조사, 복구사업을 하는 최하 말단의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센터를 시범적으로 하시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2000년 10월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도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였고 지금은 재정비 결정 고시 요청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재정비 구역 안에는 건축행위나 토지 매매 행위를... 매매 행위는 가능하겠습니다, 건축행위 등 이런 게 허가가 안 나는데 내가 땅 사서 뭐합니까? 그래서 전연 거래도 안될뿐더러 자기 재산의 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난해 10월달에 도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 갔다가 또 오고 도에서 시로 다시 또 보완을 하고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지난해에 포항시장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2001년도 6월달이면 모든 것이 끝나서 여러분들의 권리행사에 문제 없다, 또 6월달이 되니까 8월달이 되면 또 된다, 8월달이 되니까 또 10월달에 된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

서 언제쯤 된다고 하면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교통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대구터미널에서 울진으로 가는 왕복 시외버스가 있는데 포항에서 첫기착지가 청하입니다. 청하에서 다음 기착지가 송라인데 거기에서는 거리가 3km밖에 안 되요. 그런데 포항에서 홍해까지는 8km 나 됩니다. 그런데 울진 계시는 분들이 홍해 오려면 포항 시외버스정유장까지 갔다가 포항 시외버스회사에 요금을 좀 납부하고 다시 홍해로 와야 됩니다.

또 영천·경주등지 지역에서 홍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홍해는 선린대학에 학생이 한 3,000명, 한동대학에 한 2,500명, 거기 종사자까지 한 3,000여명이 되고 홍해읍의 읍민이 3만5,000명, 그래서 4만명이 삽니다. 아마 경상북도의 1개군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시외버스 좀 세워 달라니까 안 되요.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홍해읍민 전체가 의장, 협의회장 다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넣어도 이 서류가 계속 튕겨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포항 시내버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포항 시내버스가 데모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마 지사님이 이것 결정 못하면 경상북도 행정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개 회사가 좀 어렵고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해와서 신광가는 사람이 시외버스 값 싸다고 포항에서, 홍해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시외버스 한코스 타면 두코스 타야 되는데 그 시외버스를 그런 식으로 탈 분이 없다, 시외버스 탈 사람은 타고 시내버스 탈 사람은 탄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0여년간에 걸쳐 우리 전 읍민이 여러 번 진정서, 탄원서를 냈습니다마는 지사님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결이라서 전달이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 의원이 여기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T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T, 즉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문화기술, 환경기술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무엇보다도 5T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도가 5T사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은 한데 묶어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 및 별도로 추진해야 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T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본도의 계획과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 분야에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초청하거나 위촉해서 이 5T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앞으로 도래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재정립 되고 살기좋은 경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경북도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고견을 듣고 5T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한단계 높은 경제의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비전을 제시하여 중앙정부로 하여금 큰 관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천우의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출범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지사는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하고 보니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항상 협의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의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의회사무처로 발령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협의회에서 하던 인사를 의장이 추천하면 지사님은 보내주도록 그렇게 인사권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의장님이 추천만 하면 지사님이 보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제도로 지사님이 해주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과 항상 의회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전문집단과 정책을 논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업무를 보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은 본청의 직원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유능한 분이 안 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계신지요?

의회출범 당시 사무처 간부들은 집행부 간부들보다 한 직급씩 더 높은 단계에서 출범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청 과장이 사무관일 때 의회 양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서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 국장은 부이사관이고 사무처장은 이사관으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출범 당시와 동일하지만 집행부는 각 과장이 전부 서기관으로 한 직급씩 올라갔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 중 하나가 간부들의 직급상향 조정이나 좋은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것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위상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지방의회를 존중해주는 의미로 양 담당관에서 바

로 국장과 맞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은 본청 고참과장 중에서 선발하여 보내 줌으로써 바로 부군수·부시장으로 나가는 걸로 타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공을 세울 일도 별로 없고 공을 세운다 그대 봐야 잘못하면 집행부에 밋보일 형편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보좌 잘해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밋보이면 아마 승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공을 잘 세우면 훈장도 받고 1계급 승진할 기회도, 아마 승진의 기회는 그 쪽이 안 나온가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좀 올라가고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는 서기관급이 10명 이상이고 속기사를 포함해서 80명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상의 문제가 따라 다니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하고 소신껏, 의회사무처는 소신 없는 게 아마 본인들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대안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인원 분포를 보나 간부 분포를 보나 마땅히 본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영 의원(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 배석한 관계관 여러분!

류인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3백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채희영입니다. 본의원은 제6대 도의원 임기를 10여 개월 남겨놓고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는 변하면서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 어느 시대이건 인간의 힘으로 진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새기면서 역사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믿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쌀 산업이 파탄지경에 와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통렬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절망 속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 W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미 1990년 초반부터 고품질 양질미 생산에 착수하여 유기농 쌀을 집중 재배하여 언제든지 우리나라 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중국의 동북3성의 성정부에서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에 해당하는 녹색식품제를 도입해서 친환경유기쌀 생산에 주력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 전체보다 많은 700만 톤 가량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흑룡강성의 경우 성정부 녹색식품관리소에서 비료와 농약을 공급하는 등 성 정부의 엄격한 관리 아래 녹색식품 쌀이 전체 생산량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백만 쌀 재배농가가 몰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공격적인 농업정책을 외면한 채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은 정부가 제시한 수매 물량 중 시가매입물 약 200만 섬과 정부수매곡 전량의 시장격리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2002년도 쌀 수급계획을 수확기 이전에 농민과 민간유통업자들이 쌀 값추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의 수확기 쌀 재고 누중이 1,100만 섬으로 쌀값의 계절 진폭이 0.4%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의 77%가 쌀농사를 짓고 쌀소득이 농업소득의 50.3%에 달하는 농가의 기간작물인 현실에서 최소한 쌀값의 계절 진폭이 5%는 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무정책임을 개탄할 뿐입니다. 진정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지사님께서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농촌 농민을 구제할 대책은 분명히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본의원이 더욱 한심하다고 포효하는 것은 정부가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책이 빠져 있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확대 등 전체 대책의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하나의 커다란 고무풍선이 아닐 수 없으며 농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박 겉핥기식의 농업정책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녹색식품쌀의 종자도 성정부 차원에서 일본계 고시히까리 등을 교배시켜서 OU1호와 요갱249호 등 국제 경쟁력이 강한 우수품종을 개발해서 재배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RPC들이 대부분 도산했고 농협 RPC마저 적자를 견디기 어려워 쌀 농가 기반이 뿌리째 무너지고 있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다수확 정책에서 양질미 생산정책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우리나라가 국제정세에 밀려 관세화를 수용하게 될 경우 80kg 한 가마당 10만원에서 12만원선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우리나라의 쌀농업은 함몰하고 말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한 가마에 3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동북3성에서는 한국이 원한다면 AA급 녹색인증을 받은 최고급쌀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가격과 품질을 따를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병어리 냉가슴을 앓듯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농촌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농촌 농민도 3백만에 포함되는 위대한 경상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함께 누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의 지혜에 가득찬 경상북도의 농민 구제대책과 쌀농업의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사님!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체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는 한국농업의 포기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북농업의 주요상품인 사과, 배,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를 칠레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최대 피해 산업이 농업분야인데 금액으로는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농축산물이 피해를 보게 되며 한국이 칠레 측에 제시한 5차협상안에서 사과, 배 혹은 한두 품목의 다른 품목을 추가로 양보할 경우 경북의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에 미치는 피해의 도는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대외적 성과에 매달려 칠레가 주장하고 있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수용할 경우에 한국농업은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희생불가의 상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칠레와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 지

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생산 계절이 달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수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농업대국이자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에 속해 있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운운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아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칠레는 국민소득이 4,300여 달러에 달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무역 규모 역시 한국의 10%에 불과해 보완적이라고 내세우는 경제구조와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지난 6월30일 개최된 민주당의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농림수산해양분과회의에서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림분야는 제외하거나 상대국을 싱가포르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은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추진 농업부분이 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이 지적 사항을 이의근 지사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칠레 자신도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예외를 인정했고 미국과의 협정에서도 농산물의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레는 한국 측에 대해서만 유독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국제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민감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존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과하고 한국만이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의 생존권 보존을 위한 몸부림에 철퇴를 가하려고 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부림만 당해온 민초들이 농민이었다면 그들을 이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비록 농민이 새벽을 알리는 수탉처럼 민감하지는 못하고 해동청 보라매가 짐승을 사냥하듯 민첩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국민임은 분명할진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지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민간기구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한·일, 한·미, 한·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들 국가들과의 협정 추진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상식을 통상당국자들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내용보다 체결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농민은 죽어가도 이 정부는 한 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현대판 동학 농민봉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조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승희 교육감님,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학교는 학생들의 현재 삶의 터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것이 정도이고 상례라 했으니 교사가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1999년부터

금년 5월말까지의 기간에 초·중등교사 22명, 일반직 공무원 41명으로 도합 63명이 각종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초·중등교사의 경우 불륜관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도박행위 등 징계의 종류가 다양한데 경약을 금지 못했습니다.

일방직도 강도상해, 뇌물수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3월14일에는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파면된 기능직을 보고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들 또한 평범한 인간으로 볼 때는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스승이기 때문에 아니되는 것이며 학생들이 이들을 따라 배우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된 죄질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직의 경우도 교사들과 함께 한지붕 밑에서 공생하고 있는고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죄질의 영향이 교사들과 같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의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했듯이 징계를 받은 63명이 직분과 책임 그리고 스승의 자리를 숭고하게 지키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스승의 상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북교육의 단면적 치부가 숨겨진 채 고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맹모삼천지교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믿고 경북교육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직 공무원의 잔학한 범죄유형이나 또한 청렴의무를 망각한 금품수수의 죄는 각종 관급공사가 부실시공되어 공사부정으로 나타나 천진난만한 학생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사실상 TV나 신문 등에 보도 방영된 내용보다는 더욱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 열거한 각종의 징계유형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훈장의 ‘바담풍’은 영원한 ‘바담풍’이 되고 말 것입니다.

흔히들 참 스승은 오간 데 없고 교사란 직업인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 사회통념화 된지 오래되었다는 각박한 현실을 교육감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종 징계로 품위를 상실한 채 그들이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따라 배울 것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스승임을 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잃어지고 참 스승임을 자부하면서 명예로운 스승상과 교권을 지켜가고 있는 많은 교육가족을 지켜 줄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300만 도민과 학부모들이 신뢰를 갖도록 교육감님의 명예를 걸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제주감귤이 2년만에 한번 수확되고 초콜릿 우유를 사려고 십리길을 밤새 걸었으며 손으로 모를 내고 벼베기는 낫으로 하며 농촌도로는 포장도 아니되고 구불구불하다’

라고 했다면 한국사회 발전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해당된다고 교육감께서는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펴낸 1종 교과서 중학교 도덕(2)145~146쪽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농촌도 마찬가지다’ 라는 글이 있고 중간을 요약하면 ‘몇해 전 한 중학생이 사과를 껍질째 먹고 숨겨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아기엄마가 농약을 뿌리고 돌아와 아기에게 바로 젖을 먹이는데 아기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죽은 일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약의 피해는 농촌사람 뿐만이 아니라 도시사람들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무공해 식품이라는 것을 빼 놓고는 거의 매일 식탁에 농약을 올려 놓고 있지 않은가?’

또 다른 1종 교과서인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150쪽에는 ‘은행중에서도 정부가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 등 특수은행이 있으며 일반적인 은행업무를 위한 여러 시중 은행이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개정작업을 거쳐 펴낸 1종 교과서 중학교 도덕(1)164~165쪽에는 ‘추운 겨울 날 열이 펄펄 끓던 언니가 초콜릿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가 가게가 있는 읍내까지 십리나 되는 먼길을 버스가 끊겼지만 밤새 걸어 갔다와 초콜릿우유를 사왔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2종 교과서인 동화사가 펴낸 중학교 사회(1) 103쪽의 경우 제주도 감귤 농업을 ‘재배 기술은 2년에 한번 수확을 하고 연도간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유통은 상품성과 과일선별의 기준이 없다’ 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국 농촌의 이미지가 극도로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보다 큰 것을 위해 아까운 작은 것을 버려야 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제 팔을 다른 한손으로 쳐 내야 하는 결단의 순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 교육을 일컬어 백년대계가 아니라 망국적 교육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백만가지의 서러움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농민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훼손의 양금으로 멍들게 하고 있는 교과서의 표현들, 그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왜곡 기술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교육감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교과서가 우리의 해당 역사부분이 왜곡되었다고 열혈청년들이 단지하여 혈서를 쓰고 정신대 출신 할머니들이 절규하여 데모를 하고 여야 정치권이 활화산이 솟아나는 것처럼 포효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시정을 요구하며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정작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거꾸로 가는 교육내용을 가르치면서 오류를 발견치 못한 한심한 작태는 망국적이라고 감히 깨우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19세기 초반의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육감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왜곡 기술된 내용들을 알고나 계셨습니까?

장님이 돋보기를 쓰고 집필을 하고 검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상북도 300만 도민과 농촌 농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실하

고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부의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지루함을 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안 주실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양해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어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려서 즉석에서 답변이 불가하다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어제 아셨습니다. 그 서면답변이 3시20분13초에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이한 곳이 있어서 서면답변에 대한 조금의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면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답이 온 것이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자벌레가 나무를 기어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지적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답변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주도 감귤의 교과서 표현부분은 잘못된 것을 제주도교육청이 지적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어제 질문드린 그 교과서 내용은 분명히 왜곡 표현되고 잘못 기술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제주도청 감귤정책과와 제주도 감귤협동조합에 문의를 해서 팩스로 이와 같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분명히 교과서 내용과는 다르고,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와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이 답변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의 내용은 바로 학생들의 정신과 머리 속에 인지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회생활화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부분만은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답변을 기다리면서 한말 최익현 선생이 을사보호조약 때 그것을 반대해서 고종황제 앞 탑전에 가서 도끼를 메고 상소를 올린 것과 같이 교육자의 양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답변을 저는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좌하는 보좌진들도 교육감을 보좌하면서 전부 남 핑계입니다. 필자가 잘못 했고, 뭐가 잘못 했고 하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랬다, 그럼 죽은 사람을 놓고 잘 죽었다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최선의 치료를 다 했으나 현대의학으로서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쌍하게 죽었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감님께

서는 분명히 제주도에서 학기초에 발견되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면 어째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그 많은 교사들과 교장, 교육장들이 이 부분을 발견 못 하고, 본의원이 질문을 함으로써 제주도에 연락을 하고 알아 본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했다는, 이 한심스러운 작태를 본의원은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제3차 본회의.

### 손종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산업관광위원회 청도 출신 손종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더웠고 조기 가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민들이 합심 노력하여 풍년 농사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소방차 및 구급차의 자차보험 가입에 대하여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소방차가 402대, 구급차가 98대가 있으며 촌각을 다투어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만약 불의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관계공무원이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을 변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급차나 소방차는 화재나 구급업무 수행시 긴급한 차량으로써 중앙선을 넘나들며 단 1초라도 아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다가 불의의 사고발생시 그 책임을 운전자 개인 공무원에게 지운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촌각을 다투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2001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화재나 구급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건수와 수리내역, 그리고 공무원에게 변상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법규가 잘못되어 자차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다면 법을 개정토록 건의할 용의와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차량 운행지역 외 보험가입에 대해서입니다.

소방차 및 구급차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소방공제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사업 경험으로는 차량운행 지역 외의 타지역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차량사고시 보험회사의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량운행지역 시·군 보험대리점으로 분산 가입을 하도록 하여 만약의 사태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공무상 부상시 조치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시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 산재보험 또는 사업주가 상당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시립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공무상 부상시 완치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도 의용소방대원은 1만1,082명으로써 만약의 사고에 대하여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에 있어 소방사 4호봉에 준하여 지급토록하여 사망의 경우 유족보상금이 2,000여만원을 조금 초과하는 정도로써 매우 적으며, 또한 기타 보상금도 현실과 동떨어진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은 금액은 위험을 무릅쓴 봉사에 대한 긍지마저 잃을 수 있는 금액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소방공무원 1,647명에 대해서도 위험한 업무수행에 따른 만일의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에 있어서도 연금공단에서 기준한 치료비 외에 본인 부담으로 요구되는 금액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소방대기소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도내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없는 읍·면에 소방대기소를 123개소 설치하여 주간근무 65개소, 격일제 근무 61개소로 상시 근무인원이 단 1명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극소수로 운영되어 화재나 사고 발생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휴가 등의 경우 교대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관해서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 24시간 근무체제로 정규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간만을 보면 시간외 근무시간이 105시간이나 되나 수당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31시간으로 되어 매우 열악하여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사기양양 대책의 일환으로 100%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께서서는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유치원 및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 책정근거에 대해서입니다.

도내 유치원 수는 공립이 539개교, 사립이 196개교로써 2001년4월1일 기준 3만5,786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공립인 병설유치원의 원아에게는 순수한 교육비로 월 평균 1만원 정도인데,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인건비, 급식비를 모두 포함하는 월 평균 10만원 정도 지원하므로 공립인 병설유치원 지원이 터무니없이 적어 학부모는 각종 교재비, 급식비 등을 별도로 부

담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원이 많은 사립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으므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혜택을 많이 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은 농촌에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는 매우 크므로 이는 불합리한 사항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 5세 이하 무상 교육실시를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2005년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사립과 공립인 병설유치원의 불합리한 지원형태로 한다면 문화 혜택을 못보고 있는 농어촌은 큰 차별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결식아동이 없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결식아동이 되는 이상한 형태의 사회구조를 가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7,658명에 한끼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기준으로 39억2,8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생 1,543명에 대한 교육비로 4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유치원생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은 현재 결식아동이 없어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으로써 유치원 결식아동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병설유치원의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81년 병설유치원을 처음 설립할 때 유아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자 시작한 것으로써 2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병설유치원은 냉·난방도 되지 않는 유휴교실을 사용함으로써 유아 교육장으로 부적절하며, 사립유치원이 없는 농어촌에 대부분 위치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열악한 시설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현실로써 조속히 대도시 사립유치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정보보호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의문되는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에서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국·공립학교의 예산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그 도입을 천명한 이래 이 제도가 교육평준화제도를 붕괴시키는 모순된 제도라는 여론으로 그간 논의가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방침을 밝히고, 이어 7월20일, 교육여건개선 대통령 보고에서 이 제도를 보고, 8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의 기준과 선정일정을 발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교육의 다양화를 명분과 취지로 하고 있으나, 교육적 차원의 논리가 아닌 대학 기여입학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시장논리의 교육정책이라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불균등과 편중을 야기시킴은 물론,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열풍이 존재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명하는 취지와는 달리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합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전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로 인해 학교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고교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면 학생, 학부모간의 위화감과 차별의식의 증대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본의원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의 도입보다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의 자율성 보장 등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운영 방안의 확정 발표 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8일,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어떤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9월10일까지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을 원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구비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서류를 심사하여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추천케 되어 있는데, 만약 신청학교가 있다면 교육감은 제출된 서류의 반력을 권고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섭 의원(기획위원회)

김천시 출신 김종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정말로 난리가 난 하루인데 오늘은 잠잠한데도 미국을 가셨는지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는 적조피해 또 콜레라로 국장님 보셔서 알지만 코피가 날 정도로 많이 뛰었습니다.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의근 지사님 항상 고생하시고 또 7차 교육정책을 법은 악법이라도 법이니까 교육감님, 정책에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시는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14일에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짊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물류단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우리가 전국에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서울권과 부산권은 해결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남았는데 전라도 지역은 32만평을 선정했다가 16만평으로 바꾸면서 국비 1,000억에 민자유치가 2,000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실시해서 지금 보상중입니다. 충청도에는 2000년7월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 66억의 혜택을 주면서 10월에 다시 재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천은 어떠냐, '98년5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98년도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부도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 5,000억원을 들여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겠느냐,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감사원에서 재심사를 하라 그래서 칠곡으로 되었는데 조건은 김천이 할 때는 390억의 국채, 지금은 얼마냐, 950억에 가까운 돈을 칠곡에 주면서 아포에서 포항간, 포항 아포에서 여수간 진입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조건으로 칠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8월10일에 장영철인가 이 양반이 내려와 가지고 칠곡에서 잔치를 치고 김천의 15만은 울면서 누구한테 호소할 때도 없고 이래서 잔치를 못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려야 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사님도 그 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시·도 쓰레기 본도내 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속에서 풍요롭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오늘 날과

같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여 깨끗한 환경이 삶의 질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가 될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정부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비현상으로 인해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려면 어느 지역도 반대하지 찬성하는 지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평소 쓰레기 처리의 1차적인 책임은 내놓은 사람이 져야 하고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는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9년10월19일 대구 MBC TV에서 방영한 대구시의원들의 질문 내용입니다.

그 당시 대구시 모의원의 질문 중 타 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 우수사례를 들면서 시장한테 물었습니다.

“대구시의 시책에 맞는 감량화와 재활용 시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구시장이 답변하기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은 민간처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원일환경」에서 달서구 15개 아파트의 1만2,000세대분을 처리하고 '99년도말이면 6만세대분을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주)청솔」,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그린랜드」 등 경북 도내에 있는 사료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는 대구시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경상북도로 보내면 해결이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구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우리 도에서 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 물겠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우리 도내로 반입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의 양은 종류별로 연간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도 쓰레기가 경북 도내로 유입되어도 우리 도의 환경오염에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타 시·도의 쓰레기 반입을 차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또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우리 도내 폐기물처리업소의 현황과 타 시·도의 쓰레기를 우리 도내에서 처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역업체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와 쓰레기 처리를 위해 투자되는 우리 도의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도산하 각 시험소·연구소의 연구실적에 관하여 물겠습니다.

지난 8월6일자 동아일보에 연구개발사업의 30%가 돈낭비라는 보도를 보고 우리 도산하 시험소·연구소의 연구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험소·연구소에 농업기술원과 산하 시험소에 88명, 농수산국 산하 가축위생시험소에 26명, 산림환경연구소에 6명 등 총192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얼마나, 145명, 전라북도는 178명, 경상남도는 165명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우리 도가 많은 편이나 이는 지사님께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직 공무원들의 '99년도, 2000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몇몇 새로운 연구실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고급 두뇌들을 사장화 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이의근지사님께 새천년을 맞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경북새천년 만들기' 비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직 공무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볼 때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산하 시험소·연구소 등에서 지난 해에 연구한 실적 중에 가장 국내·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들 기관의 연구결과가 도민의 복리증진, 소득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교와 민간연구소에서도 논문발표나 연구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구조조정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도 연구직에 대해서 연구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연구실적이 극히 미흡하거나 실적이 없으면 현업부서로 전보하든지 아니면 신분상 불이익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구직원들을 정예요원으로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센병역자, 흔히 말하는 나환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오늘 TBC를 방송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나환자촌에 3,350명이 살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사님이 좋은 말씀을 할 테니까 TV를 보세요” 라고 했더니 “오는 날이 장날” 이라고 오늘 TV 방송을 안합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난리가 나는 바람에 더더욱 안합니다. 그래서 스무 분이 어려운 걸음을 해서 지금 2층에서 보고 계십니다. 지사님은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한센병력자가 1만8,26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3,35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의근 지사님께서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한센병력자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센병력자들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한센병력자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병력자에 대해서 생활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지역인 김천의 삼애농장과 광신농장을 비롯한 도내 18개 한센병력자 정착촌에 대하여 민선 2기 3년동안 건강증진,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소득개발 지원사업의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방향과 계획도 말

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분들은 오랜 병고와 싸우는 투병생활로 인하여 장기 약물복용으로 급속히 고령 노쇠화하여 노동력이 상실되어 있으며 국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외부에 자녀가 있어도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한센병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냉대와 잘못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간의 관계마저도 끊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모가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00년 10월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100% 수혜를 받았으나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한센 병력자의 대부분이 무자녀인지라 노후대책으로 장례비를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몇 푼의 금전을 예금하였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유랑걸식조차 힘든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이들에게는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한편 18개 농장 3,350명의 한센 병력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한성협동회 대구·경북지부의 사무실이 없어서 현재 3평의 사무실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너무 딱하여 그들을 원활히 관할할 수 있는 사무실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인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계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생산품을 판매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고유한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보를 교환하고 자녀의 혼사 문제 등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유통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중소도시에서 대형 할인마트,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이 들어서고 또한 장사가 잘 되면서 전국의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 영세점포와 구멍가게들이 붕괴되어가는 실정이며, 전반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래시장이 제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상인들의 경영자세의 변화와 외적으로는 건물과 부대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나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실패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입주 상인들은 건물사용료가 저렴한 현대화 전에는 현상유지는 되었으나 건물을 현대화하고 보니 장사는 종전과 같이 잘 되지를 않는데도 지출이 많아 그만 문을 닫는 점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주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문제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5일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지역 여건, 상권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시설 배치모델,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

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유지형인 현재의 재래시장을 대형유통업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댐 건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안동댐과 임하댐 등 8개소의 댐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 건설당시 수몰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관계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댐 건설이후에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개 등으로 인해 영농피해는 물론 인체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몰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로 흩어져 낯설은 타향에서 실향민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북에서는 전국 7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 중 본의원의 지역인 김천 감천댐을 비롯하여 6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에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도는 인구가 줄어드는 등 도세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기존 댐의 수몰지 이주민 정착촌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착촌에 대하여 지원을 했다면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대로 댐을 건설한다면 수몰민과 인근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에게 아트타운(Art Town)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7월 현재 우리 도내의 아트타운 조성은 영양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29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도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타 시도에서는 없는 우리 도만의 특색있는 아트타운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승희 교육감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트타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아트타운 조성은 언제부터 추진되었으며 추진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트타운의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활용 대상자는 누구이며, 학교 교육과 아트타운 활용과는 어떠한 연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트타운 조성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도민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되고 낡은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아트타운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등이 편리해야 될 것인데 각종 편의시설 설치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조성계획과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만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영주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소속 박성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 집행부와 경상북도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의 콜레라와 적조예방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1일 날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테러에 대해서 참으로 비통하고 비감하고 어떠한 문구표현을 써서라도 무방비상태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숙연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11일 날 있었던 미국의 심장부 뉴욕과 워싱턴의 폭탄테러에 대해서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의 도정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1날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오염하고 분노하고 아비규환의 상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10월4일날 경상북도 12개 농산물업체가 뉴욕 청과물 한인상회에서 초청한 행사가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이미 12개 업체가 모든 물량을 선적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런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축제가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째로 우리 통상주재관은 무사하다고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민들에게 혹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민차원에서라도 도움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도와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우려할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CNN 뉴스에 미국민 94%가 테러지원국이나 테러를 도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국가와 집단을 무시하고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응징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이 엄청난 사태로 세계 인류에 가장 고조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난번까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경수로 문제, 핵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서 쌀을 달라, 기름을 달라고 외쳤습니다마는 이제는 미국의회나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경보수파가 부시 대통령입니다.

테러를 지원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 그 쪽에 대해서는 아마 엄청난 강경한 보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역방위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났지만 빠른 시일 안에 불특정 다수의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방위체계를 선도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12월 3일 우리 민족은 IMF 라는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어쩌면 여섯 번째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김대중 대통령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우리의 영토를 잃어버리는 망국적인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연방항공청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이류항공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요며칠 전에는 국제언론인협회와 신문협회로부터 언론탄압감시대상국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한·일어업협정재협상촉구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국민의 정부에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 기대할 것이 있는가? 진정으로 한국민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 선배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숙연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1910년8월29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했던 경술국치일입니다. 바로 나라가 치욕을 당한 날입니다.

그리고 9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이지 않는 IMF와 국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정치권에서 대부분을 장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기본근간인 DJP공조가 깨지면서 국민을 혼란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정치사에 웃지 못할 교섭단체의 총재가 당으로부터 제명 축출 당하는 정말 기막힌 삼류정치를 하고 있는 마지막 국치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이 정권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이 1999년1월22일 3년계약 기간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만료기간이 2002년 내년 1월22일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 우리 정부는 독도를 무인도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잠정적으로 유인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상 유인도라고 주장해야만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수호하는 기본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12해리를 주장했지만 그 당시 일본은 자기네는 대마도를 기점으로 남쪽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만료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업을 찾기전에 우리의 영토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토이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 소재한 독도를 기점으로 한 재협상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귀와 눈이 멀고 있습니다. 여·야지도부, 국회의원 어떤 누구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의원이지만 이의근 지사님을 통해서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협상 추구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또 한 가지 부탁입니다.

독도가 경상북도임이 분명하고 한 데도 어찌해서 독도방문을 하기가 이렇게도 힘들다는 말입니까?

독도 입도문제의 제도상 절차를 간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도 유인화정책에도 한 발 앞서나가는 우리 지사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완전히 응징할 수 있는 것은 독도를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곡정책입니다.

이틀 간에 걸쳐서 선배의원님들이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번, 수만번을 외쳐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절규를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도의원을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농민을 위해서 절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배의원님들이 너무나 심도 있게 질문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부에서 주도할 때 환경단체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지축소와 쌀 자가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간척사업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쌀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자가당착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 질문에 농정국장님의 대답은 저와는 좀 상이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쌀은 자포니카 타입으로 둥글고 윤기가 나는 식용입니다. 호주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인디카 타입으로 길죽하고 푸석푸석한 안남미입니다. 세계인류에 자포니카 타입을 먹는 민족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만주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이유는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들이 만주별관으로 쫓겨가면서 중국음식에 적응 못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음식인 자포니카 타입 쌀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소비량은 약 5백만 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1천만 섬의 재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잉 생산된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농업 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농업을 살리는 기초정책을 단 한가지라도 살려달라는 것을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쌀정책을 잠시나마 제가 짚겠습니다. 쌀 증산정책을 했습니다. 그 증산을 더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을 만들었습니다. 쌀 전업농을 만들어서 미국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오겠다 이래서 RPC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농민에게 눈물과 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

다.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똑똑한 관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가장 순박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단 한가지도 못 하고 있는 이 정부가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사님, 민초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겨서 농민에게 이제는 기쁨은 못 주더라도 피눈물은 주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에는 자립형 고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그 학교의 문제를 짚기 전에 본질을 짚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도농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돼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대구시와 경상북도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교실이 약 2만9,000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중 약 7,000개가 조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빛이 300룩스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300룩스 기준을 맞춘 교실은 불과 2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구시에 소재하는 학교들은 완전무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농어촌학교들은 겨울철 동절기에 중앙난방식이 아니라 개별난방식을 86.6% 하다 보니 그것이 동태수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92%가 중앙난방식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앙난방식이 8.2%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수거식 화장실이 경상북도에는 29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OECD가 제시하는 교육환경 개선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도농 간의 격차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35명 기준이라는 졸속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구성요건이 뭐니까? 학생, 선생, 건물, 공간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 말 한 마디에 6개월 안에 다 짓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멀쩡하던 테니스장 없애고 녹지공간 없애고 과학실험실 다 없애고 어디 고등학교가 정신병동입니까? 교도소입니까?

이런 얼토당토않은 교육정책을 펴 가지고 무슨 OECD 기준에 맞겠습니까? 이런 가식적인 정책보다는 본의원이 서두에 지적하였듯이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진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도 교육감님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를 사는데 군대 말년은 굉장히 무사안일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도 정년이 되면 무사안일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 계신 선배의원님들이나 저, 교육감님,지사님, 국회의사당에 있는 선거직들은 어떻게 돼서 말년만 되면 더 요동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재선에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일들보다는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과 도교육감님은 10개월 남짓한 임기 내에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실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제 흐트러진 모습들을 다시 추스르는 모습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남은 10개월 도정 전반에 대한 포부를 밝혀주시고 교육정책에 대한 포부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먹구구식, 날림식 공약은 이제는 자제해서 그동안 펼쳐나왔던 공약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V. 민원처리

###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1		1
누 계	4	-	4	3	1

※ 누계는 제6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8 (215)	(33)	(11)	1 (14)	4 (63)	(12)	(15)	1 (19)	2 (26)	(22)
의회운영										
기 획	(3)	(1)			(2)					
자치행정	(31)	(24)	(1)		(2)		(1)			(3)
교육사회	1 (37)		(3)	(1)	(2)	(12)		1 (12)	(1)	(6)
농 수 산	1 (34)	(1)	(1)	(4)	1 (6)		(1)		(19)	(2)
산업관광	(36)	(2)	(4)	(5)	(3)		(11)	(7)	(2)	(2)
건 설	6 (69)	(5)	(2)	1 (4)	3 (48)		(2)		2 (4)	(4)
특별위원회	(5)									(5)

※ ( )안은 6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3 (206)	3 (204)	(2)			5 (9)
의회운영						
기 획	(3)	(3)				
자치행정	1 (31)	1 (30)	(1)			(1)
교육사회	(36)	(35)	(1)			1 (1)
농 수 산	1 (34)	1 (34)				
산업관광	(36)	(36)				
건 설	1 (61)	1 (61)				4 (7)
특별위원회	(5)	(5)				

※ ( )안은 제6대 의회 누계

## VI.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2001. 8. 29)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2001. 8. 30)
경상북도교육감 (2001. 8. 29)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사회위원회 (2001. 8. 30)
경상북도지사 (2001. 8. 30)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2001. 8. 30)
경상북도지사 (2001. 8. 30)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2001. 8. 30)
경상북도지사 (2001. 9. 4)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2001. 9. 4)
경상북도지사 (2001. 9. 13)	생활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	자치행정위원회 (2001. 9. 13)

### 2.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제 목	소관위원회 (회부일)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최용 외38인 (2001. 9. 3)	성주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추진 저지 청원	교육사회위원회 (2001. 9. 3)

### 3.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1. 7.12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2001. 8. 1
2001. 7.12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2001. 8. 1
2001. 7.12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	2001. 8. 1

###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위원회	7. 21 ~7. 22	성주	○ 의회운영 연찬회 - 상반기 의회운영 결산 - 하반기 의회운영방향 협의
	9. 5.	운영위 회의실	○ 제162회 임시회 회기협의 ○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자치행정 위원회	8. 16 ~ 8. 18	광주, 전남	○ 비교견학 - 전남 자연학습원 - 광주 소방안전본부, - 영암읍 주민자치센터
교육사회 위원회	8. 16 ~ 8. 18	안동, 영주	○ 현지확인활동 - 노인전문요양병원 - 자연휴양림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8. 8 ~ 8. 10	포항, 영덕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및 어촌기반시설 현지확인활동
	9. 3 ~ 9. 4	동해안 일원	○ 적조발생지역 현지확인활동
건 설 위 원 회	7. 25 ~ 7. 26	경주 청도	○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 청령~현곡간 도로확·포장공사 - 청도천 가금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매전면 당호리 매전교 개통식 참석
	8. 13 ~ 8. 14	의성 영양	○ 풍수해대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 위천위양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수하~왕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 청암교 개통식 참석

## 5. 기타사항

###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

- 일 시 : 2001. 7. 23(월) 12:00
- 장 소 : 청와대
- 참 석 : 류인희 의장

###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총리초청 만찬

- 일 시 : 2001. 7. 23(월) 18:30
- 장 소 : 국무총리 공관
- 참 석 : 류인희 의장

○ 의원 북유럽연수

- 기 간 : 2001. 7. 23 ~ 8. 3
- 장 소 : 독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 외 8명

○ 국제친선교류활동

- 일 시 : 2001. 7. 25 ~ 7. 31
- 장 소 : 러시아, 중국
- 참 석 : 장성호 연맹회장 외 9명

○ 경북 여성농민 한마당행사

- 일 시 : 2001. 7. 24(화) 11:30
- 장 소 : 영천시 은혜사
- 참 석 : 이광언 의원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1. 7. 27(금) 09:30
- 장 소 : 강원도 강릉 강릉관광호텔
- 참 석 : 김창언 운영위원장

○ 안동대 농업개발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강의

- 일 시 : 2001. 8. 30(목) 13:50
- 장 소 : 안동대 농업개발원
- 참 석 : 이정백 농수산위원장

○ 한국국학진흥원장 취임행사

- 일 시 : 2001. 8. 7(화) 12:00
- 장 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참 석 : 류인희 의장

○ 제6회 경북농업경영인대회

- 일 시 : 2001. 8. 9(목) 19:30
- 장 소 : 포항 칠포해수욕장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 농수산위원

○ 광복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1. 8. 15(수) 10:00
- 장 소 : 안동시민 복지회관
- 참 석 : 류인희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위원 위촉식

- 일 시 : 2001. 8. 22(수) 15:30
- 장 소 : 청와대
- 참 석 : 류인희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 일 시 : 2001. 8. 22(수) 16:40
- 장 소 : 서울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 참 석 : 류인희 의장

○ 2001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 일 시 : 2001. 8. 23(목) 14:00
- 장 소 : 경산시 와촌면 세종수련원
- 참 석 : 이철우 부의장(축사)

○ 경상북도 을지연습 참관

- 일 시 : 2001. 8. 23(목) 16:00
- 장 소 : 경상북도을지연습장
- 참 석 : 류인희 의장, 이상천 부의장, 이철우 부의장  
김진목 기획위원장, 이천우 산업관광위원장,  
윤상주 건설위원장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1. 8. 23(목) 15:0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 참 석 : 김창언 운영위원장

○ 전국시·도 의정협의회 실무위원회

- 일 시 : 2001. 8. 25(토) 10:30
- 장 소 : 포항시 대보면 호미곶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선물전달)

○ 민주평통자문회의

- 일 시 : 2001. 9. 6(목) 15:00
- 장 소 :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 참 석 : 도의원

## 부 록

- 예 산 안 : 1건
- 조 례 안 : 4건
- 결 의 안 : 1건

□ 예산안 : 1건

-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1년 8월 29일,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 9. 11)

라. 의결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 9. 11)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함.

### Ⅲ. 예산(안)의 주요 내용

#### □ 세입·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6,099억 5천3백만원보다 484억 7천9백만원(3.0%) 증가한 1조 6,584억 3천2백만원입니다.

#### □ 예산이 늘어난 이유

##### ○ 세입부분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 1,082억 9천4백만원보다 484억 7천9백만원(44.7%)이 증가한 1,567억 7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이며 지방채 차입금이 증가되었습니다.

##### ○ 세출부분

학교교육비에서 기정예산액 6,376억 7천6백만원보다 484억 7천9백만원(7.6%)이 증액된 6,861억 5천5백만원으로 고등학교의 신설(3개교)에 292억7천9백만원과 교실 증·개축(240실)에 19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표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관		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합		계	1,658,432	1,609,953	48,479	3.0	
의 존 수 입	소		1,501,659	1,501,659	0		
	국 가 부 담 수 입		1,331,453	1,331,453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06,920	1,106,920	0	
		지방교육양여금		215,047	215,047	0	
		국고지원금		9,486	9,486	0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69,408	169,408	0		
		법정전입금		169,154	169,154	0	
		비법정전입금		254	254	0	
	주민(기관 등)부담금		798	798	0		
	자 체 수 입	소		156,773	108,294	48,479	44.7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03,185	103,185	0			
		재 산 수 입		4,900	4,900	0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44,356	44,356	0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58	458	0	
		잡 수 입		7,609	7,609	0	
		이 월 금		45,862	45,862	0	
지 방 교 육 채		53,588	5,109	48,479	948.8		

〈표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장	관				
합 계		1,658,432	1,609,953	48,479	3.0
학 교 교 육	소 계	686,155	637,676	48,479	7.6
	유 치 원	8,852	8,852	0	
	초 등 학 교	216,063	216,063	0	
	중 학 교	170,451	170,451	0	
	고 등 학 교	276,016	227,537	48,479	21.3
	특수학교	14,773	14,773	0	
문화및평생교육	평생교육	2,362	2,362	0	
급여·복지	소 계	916,296	916,296	0	
	급여관리	799,620	799,620	0	
	복지·후생	116,676	116,676	0	
교 육 행 정	소 계	39,231	39,231	0	
	교육위원회	489	489	0	
	교 육 청	14,374	14,374	0	
	지역교육청	10,930	10,930	0	
	교육지원기관	13,438	13,438	0	
기타경비	소 계	14,388	14,388	0	
	지방채상환	10,636	10,636	0	
	예 비 비	3,752	3,752	0	

#### IV.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 내용과 같음

## V. 종합검토 의견

### □ 금 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 정부의 “7. 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2002년까지 35명으로 감축 방침에 따라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학교 신축 및 증·개축 예산입니다.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도민과 학부모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승인 및 추진지침 통보”라는 문서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역여건, 경제동향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자주적인 노력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 전환으로 지방화를 거부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습니다.

- 교실 증·개축 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여 3월부터 정상 수업을 목표로 추진함에 있어,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등 사전준비기간과 동절기를 고려한다면 2002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하다고 시행착오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과 동절기 시공대책을 수립하여 부실공사와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 학급증설에 따라 증가되는 교원이 우리 도는 공립학교가 174명 사립학교가 398명으로 572명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시의 적절한 총원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2002년 3월 정상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002년 2월말까지 증축이 240개 교실이고 기존교실 활용이 46개 교실로 총 증설은 286개 교실입니다.  
기존교실 46개 교실은 예산절감이나, 공기단축을 위하여 특별교실 또는 여유교실을 활용함에 따라 특별학습에 소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채 발행은 국내경기와 시중금리의 동향 및 지역경제의 성장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후 차입시기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채 차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조례안 : 4건

-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1. 9.14

##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의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3)을 삭제하고 (6),(7),(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6) 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1건	30,000
(7) 주유소	1건	20,000
(8) 용제판매소 ·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10,00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1. 9. 14

##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경상북도자연학습원”을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으로 한다.

제1조중 “경상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한다)”을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학습원장”을 각각 “연수원장”으로 하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중 “학습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습원”을 “연수원”으로 하고,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장”을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시 설 사 용 료

(150명기준/원)

시 설 별		기 간			
		1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강 당		91,000	151,300	215,000	279,600
숙박시설	생 활 관	-	80,000	150,000	200,000
	가족교육관 (동당)	30,000	50,000	100,000	150,000
심신단련 및 부대시설	운 동 장	43,000	70,600	100,200	130,200
	야 영 장	43,000	70,600	100,200	130,200
	구 기 장	-	-	-	-
	테니스장	-	-	-	-

1. 강당 및 생활관의 난방비는 별도 실비로 계산함.
2. 가족교육관의 비합숙 1일 사용시간은 09:00~17:00로 함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1. 9.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커피, 음료수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의 여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m<sup>2</sup>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 공고) 도지사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허가조건, 운영권자 선발 기준 및 선발일시 등을 도보 및 반상회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65세이상의 노인, 모자복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설치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와 정신지체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매점, 자판기 등의 우선 순위(제2조 및 제5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1	장애등급이 1~2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
3	장애등급이 5~6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1. 9.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의안 : 1건

-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

## **의정활동보고서(제161회 정례회)**

2001. 10 인쇄 / 2001. 10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